

민주 이낙연 대표,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

“최저기준 보장, 적정기준 지향”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청년에 최저생활 보장
종일 돌봄 40%
국민 상병수당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면서 이낙연표 신(新)복지제도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도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선 “차떼,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라며 “아래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면서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신설하겠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며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면서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신설하겠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며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전북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와 유통환경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2일 전개했다.

전통시장·지역경제 ‘살리go’

도의회 의원들, 군산 주공시장서 장보기 행사

전북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와 유통환경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2일 전개했다.

송지용(완주) 의장과 나기하(군산)·김종식(군산2)·조동용(군산3)·문승우(군산4)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은 이날 군산 주공시장에서 고흥군 상인회장을 만나 전통시장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군산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군산 사랑 상품권’으로 과

일과 육류, 견과류, 생선류 등 사회복귀시설 위문 물품 등을 구매했으며, 어깨띠를 두르고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이날 구입한 물품은 장애인복지회관 등 군산지역 사회복귀시설 4곳에 전달했다.

송지용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생계위협을 겪고 있는 상환”이라며 “도민들께서 설성수품을 구입하실 때 전통시장을 이용해 코로나19 침체된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최영심 도의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급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대상자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서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지원을 차별 지원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원·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교유위) 의원이 지난 1일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상대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영심 의원은 “2021년도 여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중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연 13만8천원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들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생리대 선별지급제도의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선별적 지원 정책으로 인성을 통틀어 가장 감수성이 풍부해진 여성청소년들에게 역차별이라는 고민과 상처를 줄 수 있다”면서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박용근 도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FRP 사용 제한을’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제 378회 임시회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FRP 사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FRP가 파도, 염분, 자외선 등에 직접 노출돼 부식되고, 외력에 의한 마찰로 마모가 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가 발생돼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처리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차 오염이 또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중소기업들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 지급해달라’

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표자 생존비용 지원 ▲여행업 관련 세금·대출 이자 감면 정책 ▲공공일자리사업에 여행업종사자 우선순위 배정 ▲관광사업등록증 한시적 이전 발급 완화 등을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농어촌 지역 경제 회복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민주 이원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이 포함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2일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소비·생산 감소와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



세 등의 감면 및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조세특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소비·생산 감소와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도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지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와 지속되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공공의대 설립 조속 재추진을’

이정린 도의원 촉구 결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남원시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중보건의료대학 설립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특정지역에 공공의대 유치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의뢰에 또한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등 공공의대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 수에서는 5.5%, 병상 수에서는 9.6%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이상을 감당해내면서 그 존재가치를 선명하게 각

인시켰다.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필요성은 지난 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80%가 넘는 국민이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킨 것이다.

이정린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을 전환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더 이상 정치권의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립공중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즉각 재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당초 안대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시에 국립공중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노동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구축

국주영은 도의원 발의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도내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대상 및 사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실행계획의 수립·실행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협력체계 구성 등을 지원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호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